
정년 연장 논의와 노인일자리 정책 시사점

- 한국노총 「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」를 중심으로 -



춘천미래동행재단
정책개발전담

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

- 정년 연장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 분석

□ 조사 배경

- 저출산·고령화 심화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
- 특히 법정 정년(60세)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(최대 65세) 간 소득 공백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수용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
- 본 조사는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, 노인일자리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됨

□ 조사 목적

- 고령층 생계 불안 및 소득 절벽 문제에 대한 심각성·시급성 인식 수준을 측정하고자 함
-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파악하고자 함
- 정년 연장의 구체적 시행 방법, 시행 시기, 임금 조정 수용 방식 등 정책 설계와 관련한 국민 선호 확인
- 청년 일자리 참식 우려 등 세대 간 갈등 요인에 대한 인식 파악
-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·정부의 우선 조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

□ 조사 개요

(조 사 명)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

(발주 기관) 한국노동조합총연맹

(조사 기관) (주)마크로밀엠브레인

(조사 방법) 온라인 조사로 진행 (단기간 진행으로 외부 요인 영향 최소화)

(대 상) 대한민국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, 만 69세 이하의 성인남녀

(조사 규모) 1,000명 (성X연령X시도별 인구비례할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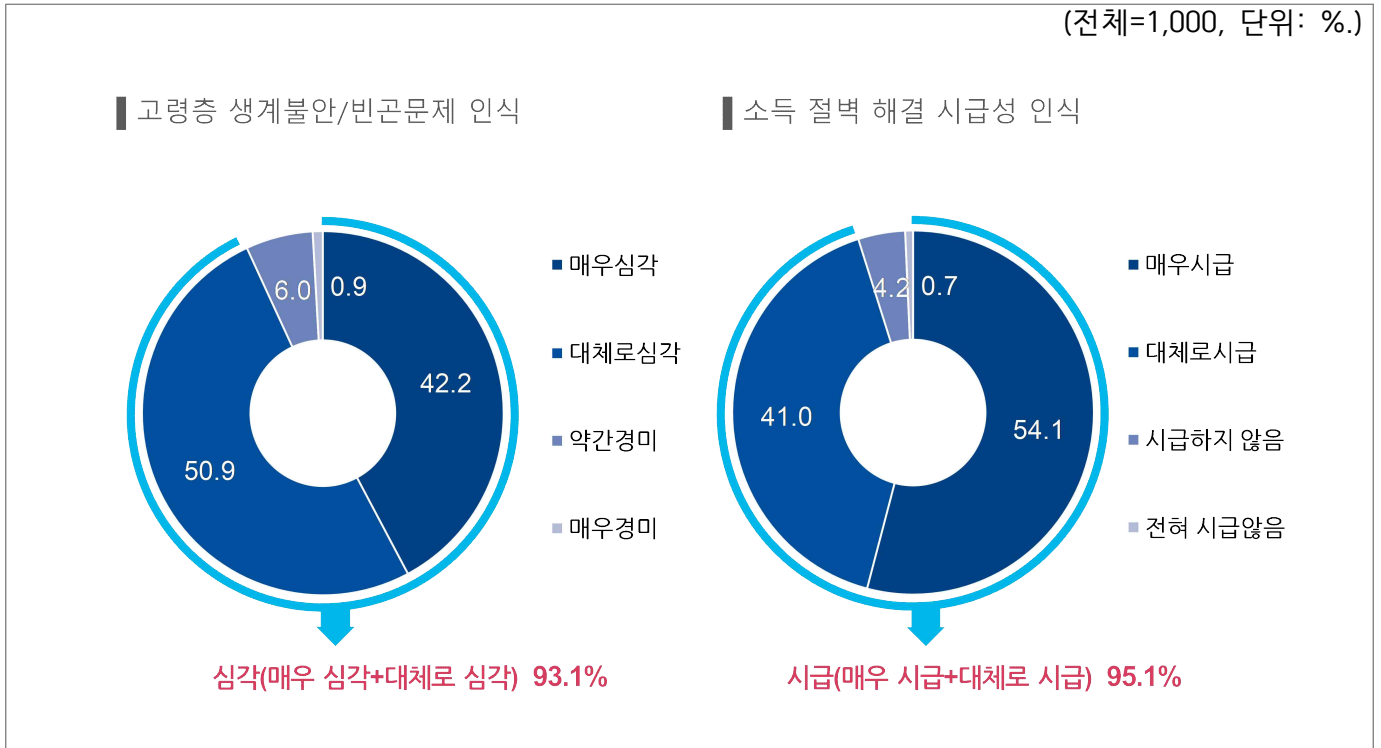
(조사 기간) 2026년 5월 27일 ~ 28일

(표본 오차) 95% 신뢰수준에서 $\pm 3.1\%p$

□ 조사 결과

○ 고령층 생계불안/빈곤문제 인식

- 심각(매우 심각+대체로 심각) 93.1% 응답
- 소득 절벽 해결 시급(매우 시급+대체로 시급) 95.1% 응답



○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

- 찬성 88.3%
- 40대(90.6%), 50대(89.3%)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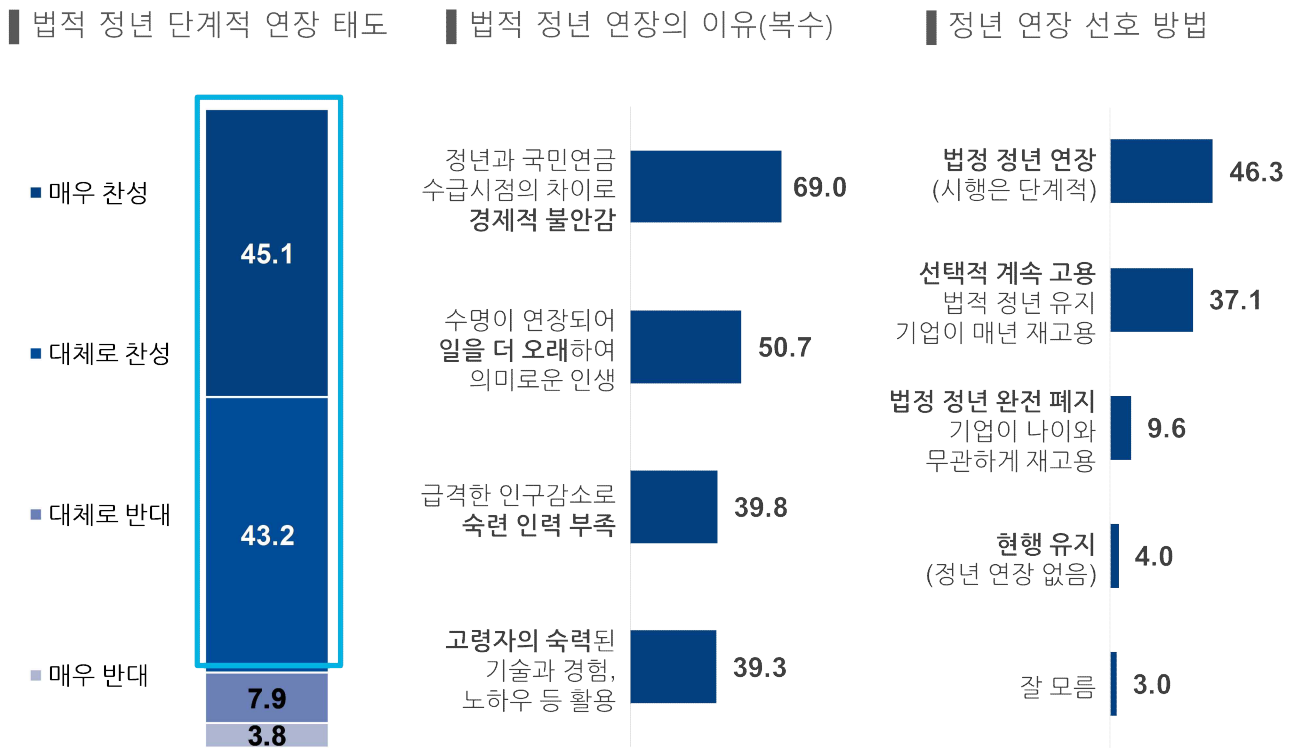
○ 법정 정년 연장의 이유

- ‘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’ (69%)이 가장 높음
- 생존·소득 보전 관점이 정년 연장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
- 그 외 ‘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’ (50.7%) > ‘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’ (39.8%) > ‘고령자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·노하우 활용’ (39.3%) 순
- 정년 연장 반대 집단도 ‘경제적 불안감’ (53%)을 1순위로 꼽아 문제 인식 자체는 공유하고 있음

○ 정년 연장 선호 방법

- ‘법을 개정하여 모든 기업 정년을 65세로 의무화하는 단계적 방식’ (46.3%) 이 가장 높은 선호를 보임
- 40대 1순위 방식 : 의무적 법 개정 방식(61.1%)
- 20대 1순위 방식 : 선택적 계속 고용(44%)

(전체=1,000, 단위: %.)



○ 법의 시행 방법

- ‘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 시행’ (52.9%)가 가장 높음
- 40대 1순위 : 조속한 전면 시행(36%)
- 30대 1순위 : 기업 규모별 순차 시행(21.2%)
- 정년 연장 반대 집단은 ‘장기적 도입’ (34.2%) 선호가 높아 시행을 늦추려는 경향이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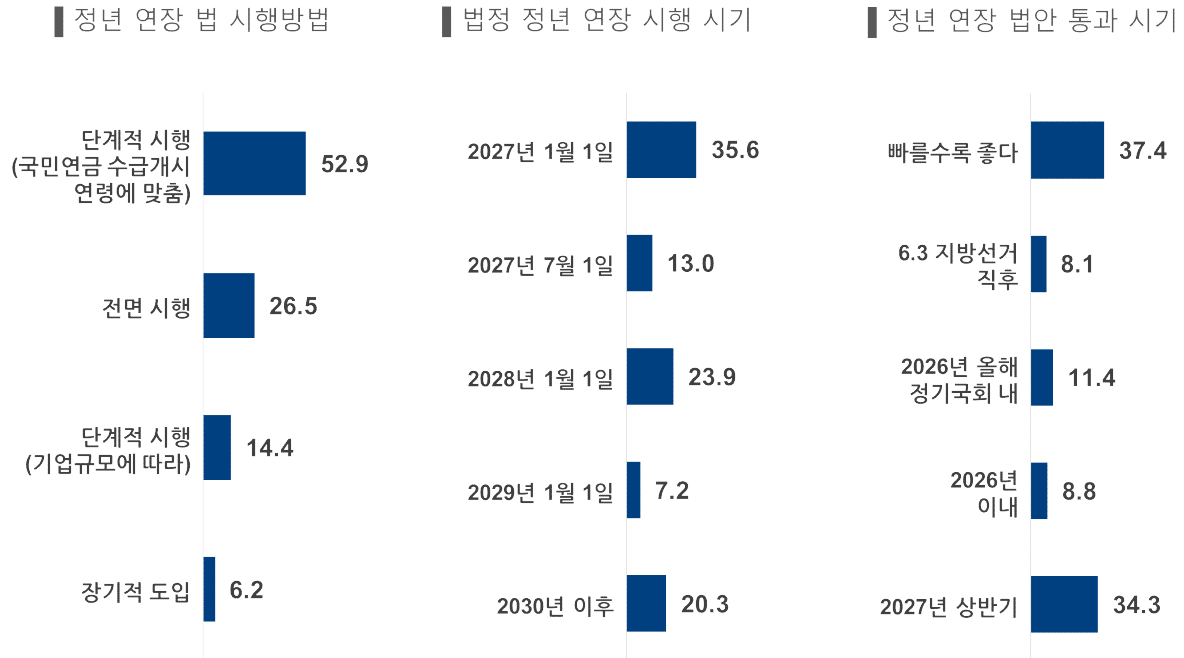
○ 시행 시기

- ‘2027년 1월 1일’ 이 가장 높음(35.6%)
- 2027~2028년 내 조기 시행 선호가 전체의 60%에 달해 사회적 기대감이 높음을 알 수 있음

○ 법안 통과 시기

- ‘빠를수록 좋다’ (37.4%)가 가장 높음
- ‘27년 상반기’ (34.3%)까지 포함하면 2027년 상반기까지는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

(전체=1,000, 단위: %.)



○ 임금 조정 수용 정도

- ‘노동시간 단축·직무 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’ (48.9%)가 가장 높음
↳ 임금 피크제보다 유연한 직무·시간 조정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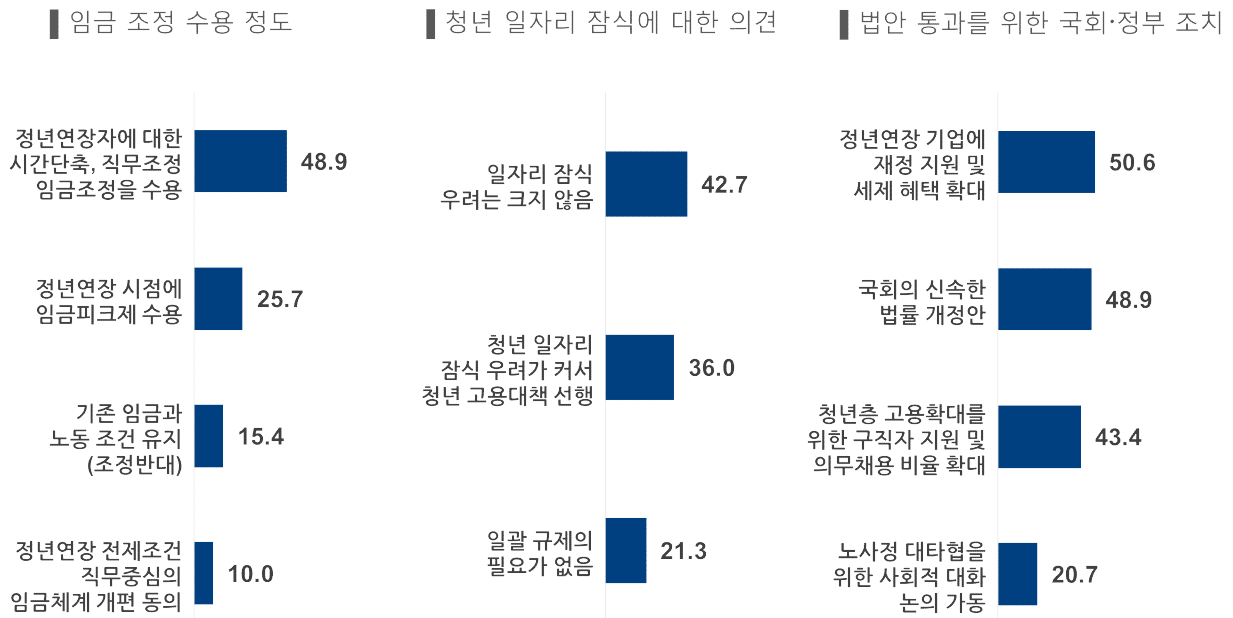
○ 청년 일자리 잠식

- ‘중장년층과 청년층 직무는 서로 달라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’ (42.7%)
- ‘청년 고용 대책 선행’ (36%)
-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것으로 분석됨
- 특히 20~30대와 정년 연장 반대 집단(54.7%)에서 청년 고용 대책 선행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, 청년 고용 보호 방안의 병행이 중요한 과제임

○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·정부 조치

- ‘기업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’ (50.6%)
- ‘관련 법률 개정안’ (48.9%)
- ‘청년 구직자 지원 및 의무 채용 비율 확대’ (43.4%)
- 요구가 고르게 높아, 재정·법제·청년 고용 모두 복합적 접근이 필요함

(전체=1,000, 단위: %.)



□ 시사점

-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인식은 고령층 빈곤 심각성(93.1%), 소득 절벽 해결 시급성(95.1%), 정년 연장 찬성(88.3%) 등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
- 정년 연장의 핵심 동인은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으로, 정책 설계 시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연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임
- 시행 방식으로는 의무적 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연장이 선호되며, 법안의 조기 처리(2026년 내) 요구가 65.7%로 높아 정치권의 신속한 입법 논의가 요구됨
- 40~50대 집단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조기 시행 요구가 강한 반면, 20~30대는 청년 고용 대책 선행을 강하게 요구하고, 은퇴자·자영업/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세대별·직업군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소통 전략이 필요함

□ 법정 정년 연장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

○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상관관계 분석

- (대상자의 분리)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로 저소득·저숙련 고령층의 생계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. 반면, 법정 정년 연장이 논의되는 범위는 주로 대기업, 공공기관 등 기존 근로자의 고용 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.
- 정년 연장으로 일부 고령자의 노인일자리 참여 시점은 늦어질 수 있으나,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참여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○ 노인일자리 참여 시기의 변화

-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60세 전후 퇴직자의 노동시장 잔류가 증가하면서 노인일자리 참여 시점은 현재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.
- 반면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고령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일자리 수요 자체가 감소하기보다는 참여 연령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

○ 일자리 유형의 고도화 필요

- 신노년층은 과거보다 학력과 직무경험이 높아지고 건강 수준도 향상되고 있음. 이에 따라 퇴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민간 연계형 사업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○ 취약계층 보호 기능 강화

- 정년 연장의 혜택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, 비정규직, 자영업자, 저소득층 등은 여전히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이 필요함.
- 따라서, 노인일자리 사업은 취약노인의 소득보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안전망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

□ 결론 및 정책적 제언

○ 결론

- (노인일자리 사업의 고도화) 정년 연장이 정착되더라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안전망 기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, 다만 퇴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의 비중과 중요성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- 결론적으로, 법적 정년 연장은 단기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직접적인 폐지를 의미하지 않으나,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상과 성격을 ‘생계 지원’에서 사회적 역할 강화로 이동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노인역량활용사업 중심의 사업 고도화

- 법정 정년 연장으로 60~64세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류 증가 예상되며, 노인일

자리 참여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나, 퇴직 이후 경제활동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- 퇴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속적 확대 필요

○ 지역사회 수요 기반의 신규 직무 발굴

- 돌봄, 교육, 행정지원, 환경관리 등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직무 개발 필요

- 참여자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를 연계한 일자리 확대 필요

-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모델 발굴 필요

○ 지역 수요처 확대

- 공공기관·사회복지시설·민간기업 등과 협력을 통한 노인역량활용사업 확대